# 美 '블루 쓰나미'에 국내 기업 고심… 친환경 기대·관세 부담

**민주당, 텍사스·조지아 선거 승리**
**삼성·현대차 등 주요 생산기지 위치**
**현지 정치권과 협력 관계 재정비**
**전기차·배터리 지원 확대 가능성**
**트럼프 관세 중심 통상 압박 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텍사스와 조지아 등 공화당 강세 지역까지 장악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그룹 등 현지 투자 기업들의 대미 전략에 변화가 예상된다. 친환경 산업 지원 확대 등 기회 요인이 있지만 관세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대응 부담은 여전할 전망이다.

5일 재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지아와 텍사스의 주지사 및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며 현지 정치 지형을 바꿨다. 이에 따라 현지 진출 기업들은 정·관계 네트워크를 재점검하고 대관 전략을 조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민주당과 관계가 깊은 인사 영입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지역은 국내 기업의 핵심 생산 거점이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세아제강과 휴스틸도 텍사스에 강관 생산시설을 두고 있다. SK하이닉스은 인디애나주 첨단 패키징 시설 등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연방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지아에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를 비롯해 현대트랜시스와 HL만도 등 부품사가 진출해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대차와 배터리 합작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SK온도 커머스에 단독 배터리 공장을 두고 있다.

민주당의 정책 기조는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에 기회 요인으로 꼽힌다. 친환경 산업과 전기차 보급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만큼 전동화 전략을 추진하는 현대차그룹과 배터리 기업들의 사업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다. 재선에 성공한 존 오소프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도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으로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에 우호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연방정부의 통상정책은 별개 변수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적용 범위가 기존 철강·알루미늄·구리와 자동차·부품에서 의약품과 드론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의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 결과 역시 향후 국내 수출기업의 통상 환경을 좌우할 변수로 지목했다. 반도체 업계 역시 AI 투자와 보조금 정책의 향방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행정부의 관세 중심 통상정책이 큰 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KOTRA 관계자는 "관세 부과가 의회 입법보다 대통령의 행정 권한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더라도 정책 기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며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더라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커 통상 압박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계 관계자는 "의회 권력이 민주당으로 넘어갔다고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 전면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추가 정책 변화와 현지 규제 가능성을 예의주시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美 데이터센터 규제 부담에 반도체주 급락… 코스피 5300선까지 밀려

**삼성전자 7.6%·SK하이닉스 9.5%↓**
**코스피 5% 급락·매도 사이드카 발동**
**AI 투자 지연·비용 부담 확대 우려**
**증권가 "메모리주 반등에 시간 걸릴 듯"**


미국 맨해튼 뉴욕증권거래소 전경. /AP·뉴시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압승하며 '블루웨이브'(민주당의 상징색에서 유래한 파란 물결)가 증시를 덮쳤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우려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7%, 9% 하락했다. 코스피시장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일시 중단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일본 닛케이지수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흔들렸다.

증권가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가 AI 산업 전반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규제에 따른 비용 부담과 투자 속도 조절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AI 산업 내 기업별 주가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5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5.28% 떨어진 5383.8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7.57% 하락해 20만1500원까지 내렸으며, 장 중에는 19만9800원까지 떨어지면서 20만원 선이 깨지기도 했다. SK하이닉스도 9.46% 떨어진 126만4000원에 마감했다.

일본 니케이225지수(-1.79%), 대만 가권지수(-3.20%) 등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증시의 약세는 전날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줄줄이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4일(현지 시각) 미 S&P 500은 1.58%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는 3.03% 급등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1.44% 상승세를 탔다. 하지만 종목별로 보면 희비는 엇갈렸다. 대표적으로 애플은 5.31%, 마이크로소프트 6.68%, 아마존 6.68% 급등하는 등 주요 빅테크들이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은 각각 3.17%, 7.00% 떨어졌고, 샌디스크 7.91%, 인텔 3.77% 하락하는 등 주요 반도체주는 줄줄이 뒷걸음질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우려가 나온 여파라는 해석이다.

안소은 KB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데이터센터가 집중돼 있는 텍사스, 조지아, 오하이오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 억제를 공약했던 민주당 주지사들이 당선됐지만, 데이터센터 건설이 전면 중단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데이터센터 건설이 지연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비용 부담을 마주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정치적 압박을 명분 삼아 AI 지출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은 있다"고 짚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도 "전국적인 규제는 대통령 거부권과 민주당 내부의 이해관계, 미국의 AI 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현실화에 제약이 존재한다"며 "전력망 확충 비용의 기업 부담 확대, 일부 지역의 인허가 제한 등이 대안 규제로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신규 프로젝트의 투자비용 확대나 속도조절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블루웨이브'가 메모리나 전력기기 AI 인프라 공급 업체들 주가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글로벌 자금이 한국 메모리를 팔고 미국 빅테크를 사는 '롱숏' 전략을 취할 수 있어 수급 불확실성은 잔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혜성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결국 국내 증시의 핵심인 메모리주의 유의미한 반등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AI 생태계에 대한 불안과 하이퍼스케일러 자본조달 이슈의 해소를 위해서는 엔비디아 실적과 그 이후의 추가 계약 및 실적발표를 기다려야 한다"고 짚었다.

/신하은 기자 godhe@

# 노사 교섭 현장 혼란 여전… 법 만든 국회가 안착까지 책임져야

**노란봉투법 7개월**

**❸ 입법 이후의 과제**

**민주당, 하청 교섭권 보장·점검 강조**
**국민의힘, 책임 명확화·보완입법 요구**
**원·하청 교섭 범위 놓고 해법 엇갈려**
**전문가, 현장 의견 반영·제도 개선 촉구**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사 교섭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어 이 법을 만든 국회가 현장 안착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 시행 이후의 혼선을 점검하고, 향후 노동 관련 입법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다.

5일 〈메트로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상황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시행 실태 점검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교섭 책임을 명확히 하는 보완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노동위원회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강조하며 "혼란이 아니라 안착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은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국회가 시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1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기술(IT) 산업 통합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개정노동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교섭은 특혜가 아니다"며 모회사가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인건비와 성과보상, 사업 재편·고용 등 공통 의제는 기본교섭에서, 개별 법인의 사정은 보충교섭에서 다루는 방식이 노사 모두에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기노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교섭 요구가 쟁의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법의 불명확성을 지목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경과를 확인하고 잘된 것은 잘된 대로, 문제가 발견되는 것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다시 한번 다뤄 보완입법을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노동계·경영계·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서 시행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 방향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원·하청의 교섭 책임을 의제별로 구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사업장의 안전은 원청이 책임져야 하고, 임금이나 노동시간은 직접 계약 당사자가 책임져야 한다"며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시행령이라도 새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재현 미래생각일자리센터장(공인노무사)은 보완 방안을 마련할 때도 현장 상황을 세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장비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인사·노무 문제는 칼로 무 자르듯이 분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판례를 참고해 사용자성 판단 요소를 구체화하더라도 개별 사업장의 다양한 상황을 모두 포괄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용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공인노무사는 노사가 기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돕는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이 노무사는 "지금 법이나 지침이 없는 건 아니다"라며 노사가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는 상황에서는 노무사·변호사 등 제3자가 쟁점을 설명하고 대화를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법 이후의 점검뿐 아니라 법을 만드는 과정부터 현장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형동 의원은 노동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기보다 명분을 앞세운 입법이 이뤄졌다며 노란봉투법을 "장식적인 형식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이라는 게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입법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변재현 노무사도 법을 만드는 것만으로 현장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접근을 경계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역시 입법 이후에도 현장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 노동 관련 법률을 추진할 때는 현장 적용 가능성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석 노무사는 노동환경 변화에 맞춘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입법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하는 시간에 열리는 토론회는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기 쉬운 만큼, 입법자가 직접 일터를 찾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